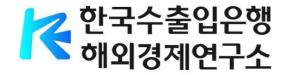
베트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2.

I. 일반개황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10
Ⅳ.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6



I. 일반개황

면 2	적	33.1만 km²	G D P 2,152억 달러 (2017년)
인 -	구	95.5백만 명 (2017년)	1 인 당 GDP 2,253달러 (2017년)
정 치 체 계	제	사회주의 공화제	통 화 단 위 Dong (VND)
대 외 정 *	책	미국·중국과 전략적 균형외교	환 율(달러당) 22,705.50 (2017년 평균)

- □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에 위치하면서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화국임. 1986년 대외개방을 표방한 도이머이 정책 도입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 전통적인 농업국이었으나 제조업 부문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과 섬유·의류제품 수출비중이 높음. 한편, 농업 부문에서는 쌀(세계 2위 수출국)과 커피를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석유개발 성공 이후 원유도 수출하고 있음.
- □ 당서기장, 총리,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척결, 국영기업 개혁, 외국인투자여건 개선 등을 위한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 ASEAN, RCEP 등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한편, 미국과는 인권문제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중국과는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해상영유권 분쟁으로 관계악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Ⅱ.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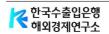
1. 국내경제

□ 수출 호조와 함께 소비 및 외국인투자 등으로 6%대의 경제성장세 지속

-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경제로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여 2012~13년 중소비 및 투자 위축, 국영기업과 은행부문의 부실문제 심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5%대에 그쳤음. 2014~15년에 성장률은 전자 및 섬유산업 등 제조업 수출 호조와 소비심리 회복,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로 6%대로 회복됨.
- 2016년에는 평균 12.4%의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민간소비 진작,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및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수혜 전망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증가함에 따라 6%대의 성장세를 지속함.
- 2017년 경제성장률은 광업 부문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출지향적 제조업 부문 호조와 함께 민간소비 증가와 FDI* 유입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된 6.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8년에도 제조업 부문 수출 호조와 함께 견조한 내수 등에 힘입어 6.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 FDI 유입액 추이(억 달러): 89('13년)→92('14년)→118('15년)→126('16년)→129('17년^e)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 4%대로 상승하였으나 2018년 소폭 둔화 전망

- 원·부자재와 중간재 수입비중이 높아 국제원자재 및 곡물 가격, 동화 (Dong) 환율 등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2012~14년까지 긴축적 통화정책 시행,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물가상승률이 지속 하락하며 2014년 4%대로 낮아짐.
- 2015년에는 소비심리 회복, 확장적 통화정책 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세 등으로 물가가 0.6%까지 하락하였으나, 2016년에는 의료보조금 축소, 학교수업료 인상 및 연말 베트남 동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를 기록함.

○ 2017년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상승,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4%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2018년에는 2017년 말 전기요금 인상 효과 지속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0% 수준을 기록할 전망임.

□ 인프라 및 복지비용 등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기조 유지

-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원유생산 등 세수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 등 투자유치를 위한 혜택 부여, 각종 인프라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16년 정부부채 이자지급* 등 재정수지 적자확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6%로 소폭 확대됨.
 - * 2016년 정부부채 이자지급 규모가 재정수입의 7.9%에 달함.
- 2017년 인프라 부문 지출 등에도 불구하고, 관세 수입 증가와 조세 징수 개선 등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추정됨. 2018년에는 간접세·소득세·법인세 등 세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개발, 복지비용 증가, 정부부채 이자지급 등으로 전년 수준의 -5.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丑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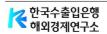
단위: %

구 분	<u>.</u>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 제 성 장	} 률	6.0	6.7	6.2	6.3	6.3
소비자물가상	·승률	4.1	0.6	2.7	4.4	4.0
재정수지/(GDP	-6.3	-6.2	-6.6	-5.8	-5.8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열악한 인프라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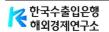
- 세계경제포럼의 2017~18년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프라 수준은 137개국 중 79위*로, 항공 (103위), 도로(92위), 전기공급(90위), 항만(82위) 부문이 취약함.
 - 특히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의 질이 열악한 편으로 운송비 부담이 높음.
 - 대도시의 경우 개인의 차량 소유는 확대되나 교통 인프라 개발이 지체 되어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함.
 - * cf) 인도네시아(52위), 인도(66위), 필리핀(97위)

□ 만연한 부정부패, 관료주의에 따른 행정처리 비효율 존재

- 국제투명성기구의 2016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6)에서 베트남은 33점을 득점하여 조사대상 176개국 중 인도(79위), 중국(79위), 인도네시아(90위), 필리핀(101위)보다 낮은 113위로 평가됨.
- 베트남 정부는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강화하는 반부패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공직자의 경우 최초 임명 또는 선출 시 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재선임, 2억 동(8,807 달러 상당) 이상 재산증가 시에도 변동내용을 공개하고 상장기업과 금융기관 임직원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할 예정임.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17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경영여건은 전체 190개 국가 중 전년 82위에서 금년 68위로 상승하는 등 중상위권으로 평가됨.
- 부문별로는 건축인허가(20위), 자금조달(29위), 재산권등록(63위), 전기공급 (64위)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사업청산(129위), 창업(123위), 수출입절차(94위) 관련 행정처리에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됨.

□ 은행산업의 부실화로 인한 불확실성 상존

○ 국영기업에 대한 대규모 대출 부실화 이후 대규모 NPL, 낮은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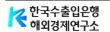
등으로 은행부문은 구조적으로 취약함.

- 2018년 1월 베트남 중앙은행에 의하면 NPL* 및 NPL 전환위험 대출 비율은 2016년 말 10.1%에서 2017년 11월 말 7.9%로 하락함. 2017년 8월 시행된 Resolution 42**가 비율 개선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 * 은행권 부실채권(NPL)비율은 2012년 3분기 4.93%에서 2016년 말 2.46%로 하락한 이후, 2017년 2분기 2.48% 수준이나, Fitch에 의하면 NPL 규모는 과소보고되는 것으로 추정됨.
- ** 2017년 8월 시행된 국회 'Resolution 42'에 의거하여, 해당 채무자가 협력하지 않더라도 은행은 담보자산을 장부가 이하로도 매각할 수 있게 됨.
- 베트남의 GDP 대비 여신비율은 2016년 말 기준 140.1%로 베트남이 속해 있는 하위중소득국 평균(66.8%) 및 인도(75.4%), 필리핀(63.5%), 인도네시아(47.9%)에 비해 높은 편임.
- 2017년 8월 말 기준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비율(CAR)은 12.37%이며 국영은행의 자본적정성비율은 9.69%로 민영은행(11.12%) 및 외국계은행 (32.17%)에 비해 미흡한 수준임.
- * 주요 국영은행(산업무역은행(Vietinbank), 농업농촌개발은행(Agribank), 대외무역은행(Vietcombank), 투자개발은행(BIDV)) 및 주요 민영은행 (ACB, Techcombank, Sacombank, MB)

나. 성장 잠재력

□ 꾸준한 수출지향적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으로 수출 지속 확대

- FDI 유입은 2014~2016년 중 평균 112억 달러 수준이며 2017년에도 129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글로벌혁신지수(GII)에 의하면 베트남의 GDP 대비 FDI 순유입은 127개 국가 중 26위로 높은 수준임.
- 대 베트남 외국인투자 중 제조업 비중은 하락추세이나 2017년에도 1~11월 누계 기준 58.4%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기록함.
- 외국인투자가 집중된 휴대폰, 섬유·의복, 컴퓨터·전자제품 및 신발 부문



수출이 상품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1.0%에서 2017년 57.5%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증가를 주도함.

- 2014년~2030년까지 발전 등 전력 인프라 개발을 위해 1,306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력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지속됨.

< 표 2 > 2017년 주요 외국인직접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	투자 분야	지역	투자금액 (억달러)
Nghi Son 2 화력발전소	전기·전력	Thanh Hoa	27.9
Van Phong 1 화력발전소	전기·전력	Khanh Hoa	25.8
Samsung 디스플레이 베트남		Bac Ninh	25.0
Nam Dinh 화력발전소	전기·전력	Nam Dinh	20.7
B-오몬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석유·가스	Kien Giang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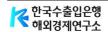
자료: 베트남 외국인투자청.

□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으며 경제활동인구 증가세로 저임 노동력이 풍부

- 2016년 말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70%로 인도네시아 (67%), 인도(65%), 필리핀(63%) 등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 말 5,577만 명에서 2017년 말 약 5,636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국민 기본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 남베트남 시절의 자본주의 시행 경험을 보유하여 경제체제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베트남은 낮은 노동생산성, 관리자급 전문인력과 숙련노동력 부족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음. 글로벌혁신지수 (GII)에 의하면 베트남은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117개 국가 중 26위로 평가되어 향후 노동력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구매력이 큰 인구비중이 높고 대도시 인구증가로 내수시장 성장 전망

○ 베트남은 9,55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5위의 인구대국으로, 2022 년에는 약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임. 구매력이 큰 25~54세 인구가



약 4,381만 명에 달해 인구의 4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대도시에 구매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제구조로, 인구 백만 명 이상의 대도시 인구는 2006년 9.1백만 명에서 2016년 13.6백만 명으로 증가함. 대도시 신흥 고소득층(vinavalet)과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고급제품 구매가 확산되고 있으며, 고성장에 힘입어 중산층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시장 성장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장기평균 경제성장률과 장기평균 1인당 GDP증가율이 각각 6.4%와 5.3%로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소득수준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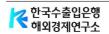
다. 정책성과

□ 공공부채 증가세에 대한 정부 대응이 다소 미흡

- 2012년 이후 베트남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을 시행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누적으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이 급증하면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가 제한되고 있음.
- 공공부채 규모는 2016년 GDP 대비 60.7%로 아시아 신흥개도국 평균 (47.0%)에 비해 높은 편이며, 2017년에는 61.5%로 추정되는 등 정부 자체 설정 상한선인 65%에 근접하고 있음.
- 한편,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양허성차관 비중 감소로 향후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전망으로 베트남은 공공부채 한도 설정(GDP의 65%), 세수기반 확대를 통한 세수 확충, 국영기업 대출에 대한 정부보증 단계적 축소, 국영기업 일반지출 감축 등으로 공공부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무역 자유화와 함께 국영기업 주식매각 등 부분 민영화 지속 추진

- 국영기업의 무분별한 비핵심부문 진출 이후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개혁과 재정보강을 위해 국영기업의 지분 및 비핵심산업 자회사 매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9월 공기업 포함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한도가 원칙적으로



철폐되고, 국채 및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이 완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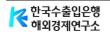
- 베트남 정부는 2017년 1월 최대 국영 석유가스 기업 페트로베트남의 자회사인 국영 전력회사 페트로베트남파워(Petrovietnam Power)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한 이후 2018년 1월 말 3.1억 달러 규모의 공개 매각을 실시함.
- 또한 2017년 12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최대 국영 양조회사인 Sabeco 지분 54%를 태국 기업 Thai Beverage에 48억 달러에 매각함.

□ 2016~2020년 사회경제개발계획 추진

- 베트남 정부는 2016년 3월 '2016~2020년 사회경제개발계획'을 국회에 제출, 동년 4월 비준을 받아 확정함.
- 동계획은 ①거시경제 안정화 및 경제성장률 제고, ②경제구조조정 및 성장모델 변화,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③시민 안전, 복지, 삶의 질 개선, ④자연재해 등의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보호, ⑤국가안전 보장, ⑥외교업무 및국제통합 활동 강화, ⑦국가 보호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국제사회에서의국제적 지위 향상 및 선진 공업국으로의 발전 등을 주내용으로 함.
- 동계획의 주요 목표는 2020년 1인당 GDP 3,200~3,500달러, 도시화비율 38~40%, 직업훈련을 받은 노동자비율 총 노동자수 대비 65~70%, 의료 보험가입 인구비율 80% 등임.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신축적인 통화·환율정책 수행

-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기준금리인 재대출금리(Refinancing Rate)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등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 촉진 및 물가상승률 안정화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 10%('12.1월)→7%('13.5월)→6.5%('14.3월)→6.25%('17.7월~18. 2월 현재)
- SBV는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2013년과 2014년 6월 동화 가치를 각각 1% 절하하였으며, 2015년에도 세 차례(1월, 5월, 8월)에 걸쳐 총 3% 절하를 단행하였고 2016년 1월에도 달러당 2만 1,896동으로 0.03%



절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 '15년 8월에는 일일 환율밴드를 ±1%에서 ±3%로 확대함.

3. 대외거래

□ 상품수지 흑자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1%대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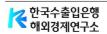
- 2015년 제조업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서비스·소득수지 악화로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0.1%로 급감함.
- 2016년에는 휴대전화 등 수출 확대와 자본재 등 수입 증가세 둔화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82억 달러를 기록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이 4.1%로 상승함.
- 수입증가에 의한 상품수지 흑자 축소에 따라 2017년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1%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총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수출증가율도 확대

- 총수출은 GDP 대비 2013년 83.9%에서 2017년 97.8%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총수출증가율도 2015년 7.6%에서 2016년 9.1%로 확대 되었으며 2017년에도 11.1%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총수출증가율(%): 14.8(′13년)→12.9(′14년)→7.6(′15년)→9.1(′16년)→11.1(′17년°)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과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외환보유액 증가세

-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경상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베트남의 수혜 전망 등으로 2017년에도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며 외환보유액은 4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인해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규모는 2.3~2.4개월로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한편,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16년 말 38.4%에서 2017년 말 42.8%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상승세이나 DSR은 양호한 수준

○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2014년 38.0%에서 2016년 46.9%로 상승하였으며 2017년에도 48.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6년 3.4%에서 2017년 4.0%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丑 3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	상	-	수	지	9,074	- 119	8,235	2,794	3,391
경	상 수	·지	/ G 1	DΡ	4.9	-0.1	4.1	1.3	1.4
상	품	-	수	지	12,126	7,396	14,013	4,033	3,542
	Í	=		출	150,217	162,112	176,632	196,886	210,521
	1	<u>-</u>		입	138,091	154,716	162,619	192,853	206,979
외	환	보	유	액	34,189	28,250	36,527	39,972	40,209
총	외	채	잔	액	70,600	80,400	94,500	105,400	117,400
총	리 채	잔 약] / G	DΡ	38.0	42.0	46.9	48.9	50.5
D		S		R	3.4	3.9	3.4	4.0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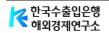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베트남 공산당 체제 하의 안정적 정권 유지 전망

○ 베트남은 당서기장, 총리,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집단 지도체제를 표방하고 있음. 2016년 1월 제12차 공산당전당대회에서 서기장 유임 및 여타 지도부 내정후 5월 국회가 지도부를 공식 교체함.



- 당서기장은 온건 중도파인 응우옌 푸 쫑이 유임되었으며, 국가주석은 개혁파인 쩐 다이 꽝이 선출되었고, 총리는 개혁파인 응우옌 쑤언 푹이 선출됨.
- 당내 개혁파와 보수파 간 갈등이 존재하나 정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며,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하여 상당기간 동안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6월 형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 정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해짐.
- 만연한 부패가 공산당(CPV)의 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2017년 9월 PetroVietnam 전 회장 사형선고 등 뇌물사건을 강력하게 다루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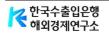
□ 경제성장 과실 집중으로 계층 간 빈부격차가 확대된 이후 다소 완화

-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외국인투자가 집중된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등 대도시 거주 상류층에 집중되면서 2010년 계층 간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으나 이후 다소 완화됨.
 - * 소득 최상위 20%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 최하위 20% 비중 대비 2006년 6.0배에서 2010년 7.2배로 확대된 이후, 2014년 5.9배로 완화됨. 지니지수(GINI Index)는 2008년 35.6에서 2010년 39.3으로 상승한 이후, 2014년 34.8로 하락하며 소득불평등이 다소 완화됨.
 - * 한편, 2014년 기준 전국 평균 빈곤율(poverty rate)은 13.5%로, 도시 지역은 3.8%에 불과하지만, 시골 지역은 18.6%로 높은 수준임.

<그림 1> 국민소득 대비 소득 5분위별 비중

단위: % 100% 90% 80% 43.5 46.3 43.0 70% ■최상위 20%의 소득비중 60% ■4분위의 소득 비중 50% 3분위의 소득 비중 21.8 22.2 21 4 40% ■ 2분위의 소득 비중 30% ■최하위 20%의 소득비중 15.7 16.1 15.0 20% 11.6 10% 10.8 0% 2008 2010 2012 2014

자료: 세계은행



- 이에 따라 정부는 농촌개발, 빈곤퇴치 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농촌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민들이 베트남 정부에 대해 기본권 등의 국제기준 준수를 요구함에 따라 토지분쟁 등 사회적 긴장이 표면화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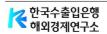
3. 국제관계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대중 관계 악화 가능성 잠재

-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 등 역사적으로 중국과 잦은 분쟁을 겪었으며 특히, 2009년 중국과의 육상국경선은 확정했으나 해상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해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음.
 - * 분쟁지역: Paracel(중국명 서사군도, 베트남명 황사군도) 도서, Spratly(중국명 남사군도, 베트남명 청사군도) 도서 및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 중국이 2014년 5월 분쟁 해역에서 석유탐사를 개시함에 따라 양국간 관계가 악화됨. 더욱이, 2015년 5월 중국 해군선박이 베트남 국영석유개발공사 시추선 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반중정서가 더욱 확대됨.
-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은 2016년 8월 남중국해 Spratly 군도 내 5개 기지에 이동식로켓발사대를 배치함.

□ 미국, 일본 및 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 전방위적 외교정책 추진

- 중국은 베트남의 제1위 교역국으로, 남중국해 분쟁 이후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축소 등을 위해 전방위적 대외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베트남은 해양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일본 군함의 깜라인 (Cam Ranh)만 기항을 허용하고, 일본·인도·호주와 안보 관계를 강화하는 등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문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과는 1995년 관계 정상화 이후 2001년 12월 무역협정이 발효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함.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군사정책'



및 '군사협력'회의를 개최하였고, 2013년 7월 정상회담 시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수립함. 베트남과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방위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 중으로 양국 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미국과의 교역에서 2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미국은 베트남 최대 수출상대국이며, 2016년 5월 미국의 대 베트남 무기수출 금지조치 해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베트남은 113억 달러 규모의 미국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11월 미국으로부터 항공기 엔진 등 21억 달러 규모 구매 계약을 체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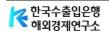
□ ASEAN, CPTPP, RCEP 참여 등 경제통합에 적극적 자세 견지

- 2015년 말에 출범한 ASEAN 경제공동체(AEC)에 참여한 이후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의 FTA가 2016년 10월 발효되었으며, 2015년 12월 체결된 EU와의 FTA는 2018년 발효를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TPP 탈퇴 이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추진 및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적극 참여 등으로 경제통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참여 ** 중국, 일본, 한국, ASEAN 10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참여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 중장기 차관 위주의 외채구조 등으로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중장기 차관이 총외채의 약 81.3% 수준으로 외채구조가 양호하며 D.S.R이 4.0% 내외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임.



○ 한편, 2017년 9월말 기준 베트남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승인액은 단기 18.7억 달러, 중장기 110.9억 달러 등 총 129.6억 달러이며, 이중 미회수채권은 중장기 80만 달러(0.01%)에 불과하여 채무상환태도가 양호한 편임.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평가기관은 베트남에 대한 신용등급 유지

- OECD는 베트남에 대하여 2009년 5등급을 부여한 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음.
- S&P는 베트남에 대한 등급을 2010년 12월 BB에서 BB-로 하향조정한 이후 유지하고 있음. 한편, Moody's는 동 등급을 2014년 7월 B2에서 B1으로 등급을 상향조정하였으며, Fitch도 2014년 11월 B+에서 BB-로 상향조정한 이후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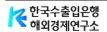
< 丑 4>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1 (2018. 2.)	C1 (2017. 2.)
OECD	5등급 (2017. 6.)	5등급 (2016. 6.)
Moody's	B1 (2017. 4.)	B1 (2014. 7.)
Fitch	BB- (2017. 5.)	BB- (2016. 5.)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 국교 수립: 1992년 12월 22일(북한과는 1950년 1월 31일)
- □ 주요 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93년), 무역협정(1993년), 항공협정(1993년), 투자보장협정(1993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94년), 문화협정(1994년), 과학기술협정(1995년), 원자력협정(1996년), 기술협력협정(2005년), 항공협정개정(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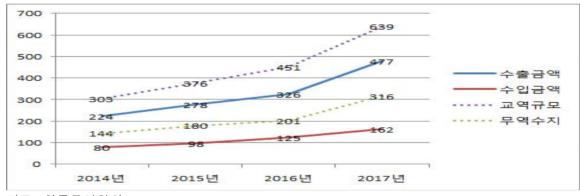
□ 교역규모 및 무역수지 흑자 증가 추세

- 대 베트남 교역규모는 2016년 451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도 639억 달러로 급증하는 등 베트남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 제4위 교역상대국임.
- 한국·베트남 FTA가 2015년 12월 발효되었는 바, 양국간 교역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양국 정부는 2020년 한-베트남 교역규모를 1,0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무역수지 흑자는 2016년 201억 달러에서 2017년 316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 기준 베트남은 중국, 홍콩에 이어 3위를 기록함.
-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부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의류, 신발 등임.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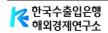
한 · 베트남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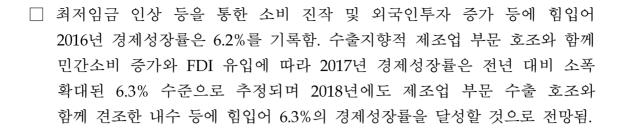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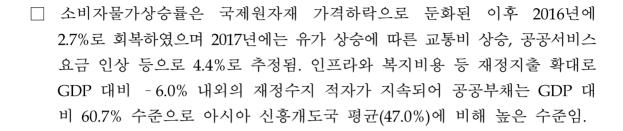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 □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7년 9월말 기준 5,231건, 166.7억 달러(누계기준)
 - 베트남은 투자금액 누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4대 투자대상국이며 업종별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21.4억 달러), 의복(12.7억 달러), 섬유제품(9.9억 달러) 등 제조업(102.6억 달러)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V. 종합의견





- □ 제조업 부문의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지속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으나, 상품수지 흑자 축소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 대비 2016년 4.1%에서 2017년 1.3%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 베트남 공산당 체제 하의 안정적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해 당분간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베트남의 제1위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며 베트남은 미국, 일본 및 인도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2017년 48.9% 수준으로 추정되나 총외채의 약 81%가 중장기 외채로 구성되어 있고 D.S.R.도 4.0% 내외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총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유입 지속과 경상 수지 흑자 유지로 증가세인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7년 말 400억 달러 수준이며 단기외채 대비로는 2.3배 수준으로 당분간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됨.

선임조사역 김찬수 (☎02-6255-5704)

E-mail: avik@koreaexim.go.kr

